

전문관리제도 시급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일이 잘못 처리되었을 때 특정인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고 공동으로 도의적인 책임을 지우는 사례가 많다. 또 왜 잘못되었는지 철저한 분석도 없고 사후 방지책도 마련하지 않는다. 특히 순환보직제 아래선 담당 공무원이 자주 바뀌어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연구책임자들도 담당 공무원이 자주 바뀌어 3년기간의 연구과제라면 3~4명 이상의 담당관이 관리를 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전문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이런 폐단을 없애야 하겠다.



鄭光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시시비비를 따지거나 책임 추궁을 몹시 싫어하는 고운 심성을 가졌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누구의 책임인가를 규명하고 책임있는 특정인을 벌하기보다는 그가 속한 그룹의 양심에 호소해서 문제를 풀려는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을 쓴다. 예를 들어 지각을 무척 싫어하는 기관장이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사람에게 규정에 따라 경고나 벌을 내리면 끝나는 일인데

벌은 차마 주지 않고 조희시간에 전체 직원을 놓고 지각하지 말라고 일장 훈시를 하는 일이 흔하다. 이와 같은 경우 지각않는 착실한 사람들 기분만 불쾌해질 뿐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사람의 버릇이 고쳐질 리가 없다. 과소비가 나라를 망쳤다면 세무 조사를 철저히 하여 불법소득이 있으면 회수하면 그 뿐이고 교통질서가 문란하면 규칙을 어기는 사람을 무작위로 엄정하게 단속하면 된다.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 정부는 환경파괴 업소를 열심히 색출하여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하면 되고 그런 와중에서 법이 미비한 것이 발견되면 법을 보완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접근 방법은 TV고, 라디오고, 온 언론 매체가 합심하여 '과소비를 하지 말자, 교통질서를 지키자,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하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여 그렇지 않아도

옆 사람 과소비에 잔뜩 위축되고 큰 업체들 환경파괴로 피해를 보고 있는 대다수의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일반 국민을 양심없는 사람들로 몰면서 효과는 별로 보지 못하고 돈만 허비한다.

도의적 책임으로 끝나

우리나라에서 장관이 물러나는 것은 거의 전부 도의적 책임을 지고서이다. 어떤 정책이 국가에 큰 손해를 입혔거나 누를 끼쳤어도 해당 장관의 죄는 없지만 도리상 물러난다는 것인데 실제로 장관한테는 죄가 없었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장관은 또 다른 요직에 부임한다.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도의적 책임이란 고위직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고차원적인 면(免) 책임이다. 어느 부서에서 일이 잘못 처리되었을 때 우리의 정서는 특정인을 지목해서 책임지우는 일이 심기 불편하므로 두루뭉실하게 공동으로 도의적인 책임들만 지고서 왜 그러한 잘못이 초래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사후 방지책도 마련하지 않고 또한 아무런 자책도 없이 다만 운이 나빴음만 한탄하는 일이다.

군대에서는 살인 사건이 생겨도 쉬쉬하며 숨기려고 한다. 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에 따라 처리한 후 그 사건이 종결되어야 하는데도 비록 책임이 없어도 그 상관들은 줄줄이 장성이 될 꿈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학교에서도 한 학생이 폐인이 될 정도로 큰 사고가 나도 교사들은 그 학생을 빨리 치료하여 정상인으로 돌아오게 하거나 장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한다거나

하지 않고 밖으로 소문나지 않게 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므로 학생들의 선생님에 대한 믿음과 존경이 없어지게 된다.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어차피 여러 종류의 갈등이나 말썽꾼이 생기게 마련이고 그런 경우에는 그때그때 해결책을 찾아 깨끗이 정리해야 하련만 공동책임을 묻는 분위기 하에서는 사건들을 감추기에 급급하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할 수도 없으니 그 단체는 안으로 끓을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우리 교육현장은 병들어가고 있다.

한 연구과제에 담당공무원 3~4번 바뀌어

삼풍사고, 성수대교 사건 등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사고의 경우 그 사고의 책임을 물어 처벌된 공직자는 한명도 없고 애매한 말단 엔지니어들만 당했다. 또한 고속전철 사업이나 영종도 공항 사업처럼 사업 자체가 부실하고 국고를 몇조씩 낭비한 사업의 입안자나 수행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없다. 너무 이상하여 곰곰히 생각해 본 결과 그 원인이 순환보직제에 있으며 또 그 근저에는 지도급 인사들은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보다는 두루두루 넓은 경력의 소유자를 선호하고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규정짓지 않으려는 우리의 정신체제가 깔려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성수대교 건설의 필요성을 입안할 때, 건설을 결정할 때의 담당자와 설계를 공모할 때 그리고 착공할 때도 담당자가 다를 것이다. 건설 도중에도 서너차례 담당자가 바뀌면서 근본 철학이 바뀌니 설계 변경을 자주 할 수밖에 없었을 터이고 감리할 때 또 건설 후 관리 시에도 수차례 담당 공무원이 바뀌고

그것도 1년 넘기면 다행일 것이니 담당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 책임감이 아무래도 덜할 터이니 적극적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란 어렵다. 순환보직제란 애당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만드는 총체적인 면책제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연구책임자를 괴롭히는 일 중의 하나가 담당 공무원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이다. 대개 담당 사무관이나 과장이 일년 이상 한자리에 있는 경우가 드물며 심지어 장관도 수명이 평균 1년 미만이었다. 한 과제를 3년동안 연구를 한다면 최소한 4번 이상 담당관들이 바뀐다는 이야기이고 바뀔 때마다 새로 인계받은 담당관들에게 사업의 내용과 의미를 새로 설명 해주어야 하며 바뀐 분들의 철학에 사업의 철학을 새로 조율해야 한다.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초전도 토카막 건설 프로젝트 때문에 미국 개인회사인 General Atomics(GA)사를 방문하였었다. GA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DIII-D라 이름붙인 토카막을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DIII-D를 담당하는 에너지성 관리들은 모두 박사학위 소지자들로서 십년 넘게 그 일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놀랬었다. 오히려 GA의 과학자 및 엔지니어들은 수시로 바뀐다. 미국이나 일본은 전문관료제도가 정착되어 있어 연구사업 담당자들은 전문인들로서 잘 바뀌지 않으며 일선 연구원들보다 해당 사업에 대해 오히려 더 잘 파악하고 있어 일사불란한 관리를 해준다고 한다. 연구책임자들은 대개 한창 일해야 하는 나이의 인재들이고 그들의 특기는 연구인데 연구 자체보

다는 서투른 인간사(人間事)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하니 국가적인 손실이 여간 아니다.

우리 사회체제와 국민 정서는 원만하고 두루두루 박식한 사람을 높이 사고 전문인을 중용하지 않는다. 개성보다는 전체적인 융화를 더 소중히 여기며 업무의 한계를 긋는 것을 야박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정신체제는 예전과 같이 사회가 균일하고 변화가 없고 폐쇄적인 때에는 좋은 체제이지만 요새와 같이 다변화한 산업사회에서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급변하는 시대에는 바뀌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사회에서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직업의식이 강조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업무의 영역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미국 범죄영화를 보면 형사들이 사건별로 담당이 정해져 그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고 수사하는 것을 본다. 국가의 사업도 단기사업이든 장기사업이든 책임을 확실하게 질 수 있는 담당을 정해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별로 관리하도록 하는 체제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야 사업의 성패가 확실한 본인의 책임으로 돌아오니까 윗사람의 부당한 요구나 민원 또는 갖은 로비에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국가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 시행하기 어렵다면 우선 과학기술 연구사업부터라도 그와 같은 전문관료체제가 빠른 시일에 확립되어 한 사업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관리책임자와 사업책임자가 같이 책임을 지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현재와 같은 세계 경쟁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⑤7